한우·굴비·전복 세트 99%가 대상…피해규모 몰라 더 불안

김영란법 직격탄 맞은 전남 농수축산업

5만원 선물세트 사실상 불가능
'고가' 수산·축산물 피해 클 듯
"한우 명절 매출 4155억 감소"
"유예기간 이라도 둬야 고사 막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탓에 백화점의 올 추석 농·수·축산품 선물세트의 외형이 줄어들고 있다.

백화점들이 선물세트 매대에서는 5만원 이하 상품을 과거보다 더 많이 진열하다 보니, 농·수·축산품의 양을 줄여 가격을 낮추거나 아예 저가의 생활용품 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란법의 피해를 고스란히 농·어촌이 떠안아야 할 형편이며, 소비 위축에 따른 타격은 농·수·축산업 비중이 큰 광주·전남지역이 가장 클 수밖에는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아무도 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 규모를 알지 못하고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지역 '직격탄'**=아직 김영란법과 관련, 매출 감소 등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친환경 고품질의 전남 농·수·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동안 인기가 많았던 이 지역의 농수축산품의 매출이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만원 이하의 상품 구성이 많은 농업보다는 고가의 수산업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국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지역 양식어장은 총 5369건 11만1127ha로, 전국 14만9793ha의 74% 규모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은 129만3000t으로 2011년 113만t 대비 14.4% 증가했다. 이와 함께 2011년 41.2% 머물렀던 전국대비 어업생산량 점유율도 작년의 47%로 5.8%p가 상승했다.

특히 김영란법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전국 점유율 97.1%에 달하는 전복류 생산량은 2011년 6785t에서 지난해 7035t으로 증가했다.

완도 등지의 어민들은 김영란법의 기준인 5만원에 맞춰 전복을 판매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적어도 10만원 이상을 줘야 선물 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내에서 42만여 마리(6월말 현재 42만5000마리)가 사육중인 한우는 선물세트의 경우 최소 15만~2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어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국내 대표적인 굴비 주산지인 영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10마리 기준으로 1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영광굴비 선물세트를 5만원에 맞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30만~100만원선에 판매되는 고품질의 굴비는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영광 주민들의 말이다.

◇**기관마다 다른 피해금액**=김영란법을 둘러싸고 여러 기관들이 앞다퉈 피해금액을 추정했지만 정확한 피해는 예측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피해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추석 선물수요 감소폭이 0.86%에 불과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1.97% 감소를 전망했다. 반면,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선물 수요만 2072억~2743억원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고, 농협축산경제리서치는 한우 명절 감소폭은 4155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영란법 대상자만 놓고 볼 것인지, 전반적은 소비 위축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피해액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권익위 용역에서는 김영란법 대상자 선물 수취자 비율을 7%로 산정했고, 다른 기관은 소비 심리 위축을 더욱 크게 보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한우의 명절(설·추석) 매출액이 최대 4155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 것은 한우 선물세트의 99% 정도가 법에 저촉되는 5만원 이상인 탓이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이 현실화되면서 단순히 법 적용 대상자의 비율만 보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의 소비 위축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완도 한 전복 농가는 "가족 중 김영란법 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다른 가족들도 위축돼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고가의 선물을 하지 않는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일부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충분한 대책을 만들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며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복(55) 영광군수협 조합장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며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이라도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기관별 피해금액 추정치**

연구기관	피해규모
권익위	청탁금지법 대상자 중 선물수취자 비율 7% 감소 선물수요 0.86% 감소
한국경제 연구원	음식업 8.49조, 골프 1.1조, 선물 1.97조 /합계 11.56조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농축산 선물수요 24~32% 감소 추정 한우생산 감소액 : 2,072억~2,743억 ※농축산물 전체 : 8,193~9,569억
농협 축경리서치센터	명절 특수 8,300억 (설 특수 4319억, 추석특수 3989억)

시름 깊어가는 정남진 한우매장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1일 정남진장흥토요시장 내 한우매장에서 고객들이 한우고기를 고르고 있다. /장흥=최현배기자 choi@

새누리 "농수축산물 예외를" 더민주 "식사·선물 가격 올려야"

정치권 김영란법 완화 요구
국민의당·정의당은 수정 반대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합헌 판정에도 불구, 일부 내용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일부분을 완화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1일 농·수·축산물만 예외 규정을 둬 선물 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에둘러 전달했고, 더민주 원내지도부는 아예 구체적으로 '식사와 선물'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직접 일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시행령 유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한데다, 원내 소수당들도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우선 시행부터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김영란법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만 안 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확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상에 들어간 만큼 이들보다 더 공공성과 영향력이 막강한 변호사와 시민단체·상급 노조도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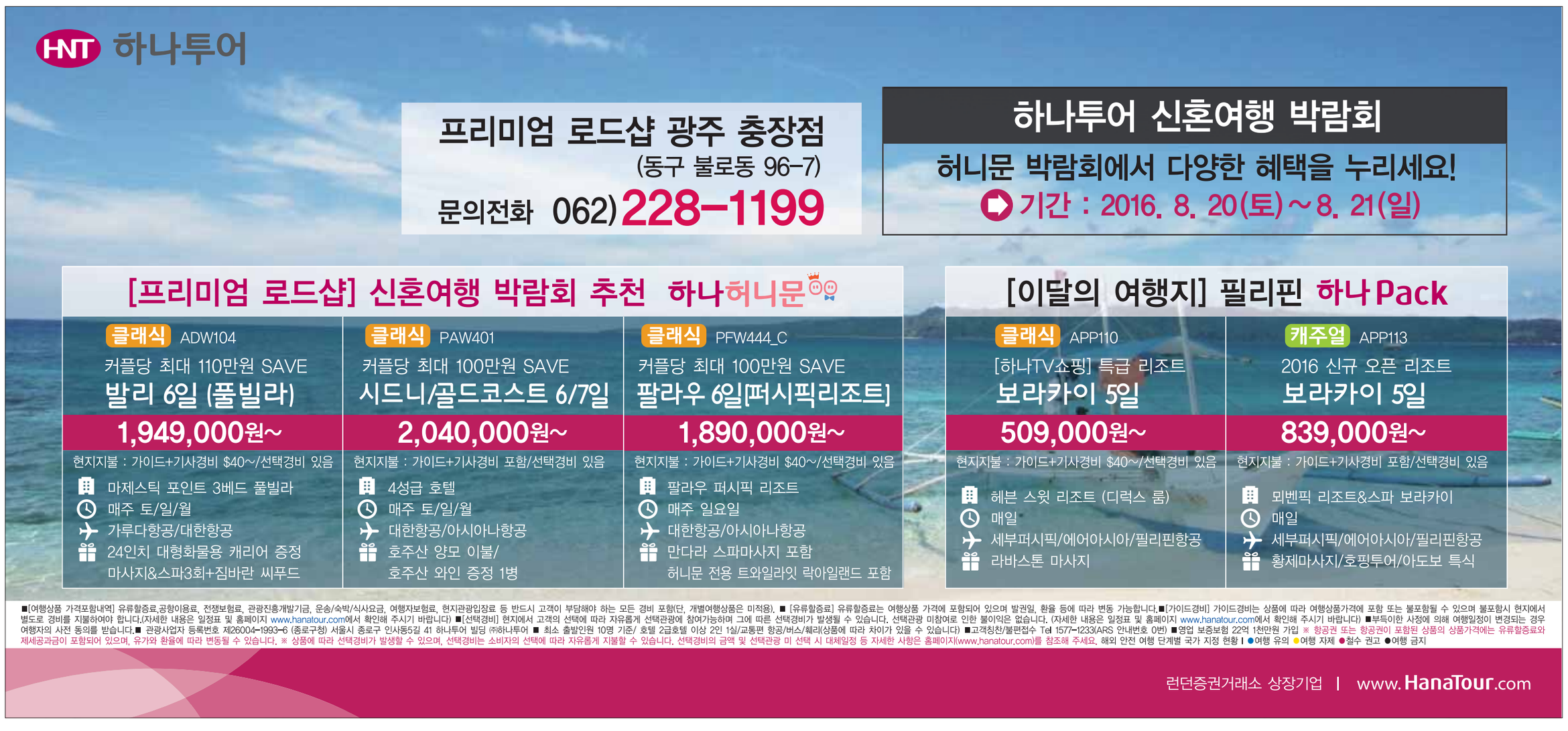
특히 변호사의 경우 김영란법 입법 논의를 촉발한 '스폰서 검사'의 '스폰서'였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쏙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상당수 국회의원 직업이 변호사라는 점이 입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담은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일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 충돌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 개정안 취지는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 김영란법 제정 단계에서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돼 논란이 제기돼왔다.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에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여기에 고위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